

- 3) 발전기획단의 존속 여부를 포함하여 향후 작업방식과 일정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4) 21일로 예정된 워크숍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성격과 규모를 제한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워크숍이 아니라 사무처 차원의 워크숍으로 위상을 낮추고, 인권위원들도 참석하지 않도록 한다.

→ 워크숍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권단체들을 완전 무시하기에는 상임위원들로서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지만, 사무처와 인권단체들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발전기획안 초안이 마련되고, 향후 인권위원들로 구성된 특위에 초안의 운명이 완전 내맡겨지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특위에서 발전기획안이 함부로 가워질당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 2. 전원위/상임위 결정의 문제점

- 발전기획단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9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주도로 발전기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회의에서는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전기획단에 초안 마련을 위임했었지요. 이후 사무처가 중심이 된 발전기획단 활동에 대해 인권위원, 특히 상임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오늘 이같은 결정이 이루어진 데는 인권위원들이 사무처를 견제하고 자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로서 발전기획단을 문제삼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물론 사무처가 인권위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발전기획단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등 충분히 내부적으로 바로잡을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발전기획단에 참여해 온 외부위원들은 물론이고, 인권단체들까지도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3. 국가인권위 전체 차원의 워크숍 개최를 요구합니다.

- 일단 21일로 예정된 워크숍은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번 워크숍이 국가인권위 조직 전체에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무처만을 상대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후 발전기획안은 인권위원들에게만 내맡기는 절차를 우리가 용인하는 것은 인권단체 스스로도 자기 위상을 낮추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인권위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야 향후 발전기획안 마련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강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은 '취소'하는 게 아니라 향후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애초의 '위상'대로 국가인권위 전체 차원의 워크숍으로 개최하되, 다시 날짜를 잡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향후 3년간 국가인권위의 방향과 업무를 결정하는 인권위원들에게 인권단체들의 의사를 최소한이라도 관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워크숍 개최 여부에 대해 16일(수) 오전까지 의견을 주어야 합니다. 그쪽에서도 이미 공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취소를 하려면 빨리 재공지가 이루어져야 할 테니까 말이에요. 제가 드린 메일 내용 참고하셔서 의견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워크숍이 다시 개최되기로 결정되면, 인권단체들이 미리 고민해갔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체 내부 논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자 인권관련 전문가/기관/단체  
(경유)

제목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보류 통보

1. 우리 위원회의 업무전략기획팀-21('05.1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알려드린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11.21.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개최예정이었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후 워크숍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다시 연락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끝.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장

직인 생략

담당 임 송

시행 업무전략기획팀 ( 22 ) 2005. 11. 16. 접수

우 100-842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 1가 16)

전화 (02)2125-9830, 9833, 9834 전송 (02)2125-9916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song@humanrights.go.kr](mailto:song@humanrights.go.kr)

/ 공개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주년! 2기 인권위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간다. 인권위가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분노하며, 권력과 재력의 뒤흔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낙후된 인권상황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권지킴이로서의 자기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가길, 우리 인권단체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2기 인권위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밝힌 3대 운영기조, 즉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교육과 정책권고의 예방활동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대해 동감했으며, 아직까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인권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필수화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인권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3년간의 업무전략을 기획하기 위해 지난 9월 인권단체 활동가 및 개인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의 논의에 주목한다. 또한 이 논의를 발전기획단 내부로 국한하지 않고 외부의 관심있는 인권단체들에게로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민간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워크숍'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높은 점수를 준다.

이는 인권위 업무 자체에 대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인권단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질적으로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권위원, 인권위 직원, 인권단체 활동가 및 개인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권위가 스스로를 낮추고 앞으로는 인권단체들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해 인권신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14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은 2달이 넘게 진행된 발전기획단 논의의 성과를 무시하고, 발전기획단 존재 자체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겠다고 의결했다. 다음날 상임 인권위원들은 민간초청 워크숍을 사무처 차원의 행사로 격하하고 여기에 인권위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애초 민간초청 워크숍은 인권위 4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다.

인권위원들은 발전기획단의 위상과 내용이 애초 자신들이 이해한 것과 다르고, 인권위의 중기전략 수립에 대한 전원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기획단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부의 문제를 이유로 외부 위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마련한 발전기획안(초안)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외부 위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자세로서, 인권위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태도다. 특히 발전기획단 논의를 2달이 넘게 조용히 지켜보다가 뒤늦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전기획단 논의를 원천 무효화한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결정 속에서는 자신의 알량한 권위만을 내세우는 인권위원만 있을 뿐, 인권신장을 위해 대승적으로 고민하고 인권단체와 협력하려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인권위원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전략적 고민과 평가 없이 수행되어 오고 있는 인권위 업무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도 성찰하고 있는 것인가? 민간초청 워크숍에는 아예 참여를 하지 않겠다니, 인권단체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싫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그것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들의 가당찮은 결정에 대해 분개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초청 워크숍이 무산된 데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의 자리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향후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관계는 또 다시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권위원들에게 있음도 분명히 한다.

최근 인권위가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해 낸 의견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공소시효배제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애초 법안의 내용보다도 더 후퇴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형해만 남은 법 논리 뒤에서 인권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먼지르르한 명분만 부여잡고 있는 초라한 인권위의 모습이 틀림없다. 인권현장을 안차게 누비며 번뜩이는 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을 대변해야 할 인권위원들의 눈에도, 이 의견의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았나 보다.

인권위가 출범한 지 4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인권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전략적으로 업무를 기획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위 발전기획안이 인권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 과정 속에서 축복받으며 탄생했을 때, 인권위는 지금까지의 관성을 벗어던지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들에게 묻는다. 지금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2005년 11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 인권위에 '쓴소리'

[연합뉴스 2005-11-25 17:01]

"인권단체 연계사업 일방 파기"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34개 인권단체가 모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주년인 25일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위 최근 활동에 일침을 가했다.


인권회의는 "인권위는 9월부터 진행된 '인권위 발전기획단' 논의 성과를 부정,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4주년 기념행사로 추진 중이던 민간 인권단체 초청 워크숍을 사무처 차원의 행사로 격하하고 인권위원은 참여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외부 위원이 대거 참여해 만든 발전기획안 초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원천 무효화하는 모습에서 권위만 내세우고 인권단체와 협력하지 않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고 "인권단체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려 한 자리인 워크숍을 무산시킨 데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인권회의는 또 "최근 공권력의 농민집회 유혈진압, 농민 분신, 음독이 속출했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 등 기민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범부터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인권위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출범 4주년을 계기로 민간 인권단체와 국민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끝)

제 목 [rights] 인권위 발전기획 워크샵 무산에 대한 대응 관련  
 보낸 일시 2005-11-28 오후 07:59  
 보낸 사람 "새사회연대" <nsociety@naver.com>   
 받는 사람 <rights@list.jinbo.net>  
 참 조 인  
 첨부파일

 주소록에 추가

새사회연대 오영경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 발전기획(안) 작성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영애 상임위원을 장으로 하고 상임 3명, 비상임 2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인권회의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25일에 인권회의 성명을 위원장과 사무총장실로 보냈었고 오늘 확인해보니 상임위원도 보고를 받아 내용은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저희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압박이 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바빠서 너무 단순하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아쉬운대로 인권위원들과 국장들, 국내협력과 등에 메일과 팩스를 넣었습니다.

중요한 국면인데요,, 앞으로 인권회의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참여 민중시대 새 사회 연 대  
<http://www.newsolidarity.org>

제목            인권위 발전기획단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름            경내

번호            3668

조회

15

등록일        2005년 09월 05일 21시 47분 29초

너무 바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만,  
범용이형이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해주는 바람에 큰 힘을 받아 제가 참여하기로 최종 결  
정을 내렸습니다.

농담처럼 제가 '범용이형의 앵무새'가 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마냥 그렇게 끌고 갈 수는 없을 터이고 내부 논의를 잘 진행해서 가야겠지요.

어쨌든 사랑방 차원에서 제가 가는 것으로 배치가 된 것이니 만큼,  
2기 인권위 혁신 방향에 대해 사랑방 내부 논의도 더 잘 활성화되었음 합니다.

더불어 제가 인권위 인권교육담당관실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성 정립에 관한 기획회의'에도 참여하고 있  
는데,  
인권위 대응이 제 활동에서 너무 큰 자락을 차지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고갈될까 걱정이 되네요.

교육실 내부에서 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네요. 고응-\_-

씨진남 남김      2005.09.06 13:32    [답]

그러게요...인권위 대응에 너무 큰 에너지를 쏟지는 말았으면...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ㅋㅋㅋ

개굴남 남김      2005.09.07 03:43    [답]

참으로 이상하게 인권위 대응과 같은 일은 아무리 작은 에너지라도 내 삶의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생각이 들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 교육을 하는 일은 아무리 큰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결국 더 큰 새 에너지를 얻어서 오  
거든요.... 그래서 인권교육이 제 삶을 밀고 나가는 힘이 되나봐요~ 운동도 마찬가지로이겠죠?

|     |                              |    |   |
|-----|------------------------------|----|---|
| 제목  | 인권위 업무전략기획팀 첫 회의(9.13) 결과 보고 |    |   |
| 이름  | 경내                           |    |   |
| 번호  | 3738                         | 조회 | 9 |
| 등록일 | 2005년 09월 20일 13시 55분 36초    |    |   |

보고가 늦어졌네요.  
 참고하세요.

=====  
 업무전략기획팀 첫 회의 결과보고

- 일 시 : 2005. 9. 13.(화) 오후 5시~6시30분
- 참석자 : 장주영 변호사, 이창수 대표, 배경내 활동가, 박찬운 정책국장, 심상돈 인권침해조사1과장, 임송 사무관
- 회의안건
  - 발전기획단 구성취지, 업무전략 기획팀 임무 등 설명
  - 팀 작업방식 등 협의
- 회의 성격: 공식적인 첫 모임이기는 하였으나, 예비모임 성격이 더 강했음.

<주요 논의사항>

1. 발전기획단 구성 취지 등

- 박찬운 팀장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국가인권위에서 보내온 제안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설명(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조)
- 이에 대한 발전기획단의 구성 취지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외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 국가인권위 내부적으로 1기에 대한 명확한 평가나 2기 방향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발전기획단이 설립된 것으로 보임. 다만 조직혁신팀(하드웨어 측면)과 발전기획단(소프트웨어 측면)을 통해 2기 위원회가 나아갈 바를 함께 찾아가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박찬운 팀장이 설명함.

2. 팀 활동방식 관련

- 위원회가 초안을 만들고, 외부 위원들이 그것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 → 다음 회의까지 인권위에서 초안을 어떻게든 마련해 오기로 함.
- 위원회가 만드는 초안뿐 아니라, 외부 위원들도 원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초안을 내어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이창수 씨는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회의는 되도록 팀원들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는 외부 위원들을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간주하고 있음.

3. 사랑방 의견서 전달

- 지난 회의에서 검토했던 사랑방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들지는 못하였음.



→ 사랑방 제안 가운데 조직혁신팀이나 발전기획단 산하 3팀 사이의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박찬운 팀장이 즉답하였음.

→ 사랑방 의견서는 현재 인권위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직원들 전체에게 공유되었고, 다음 회의에서 그 의견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 다음 회의

- 일시 : 9월 23일 4:30

- 안건 : 인권위측 업무전략기획 초안 검토

사랑방 의견을 포함하여 운영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

제목 [보고]인권위 발전기획단 외부위원들께 보낸 메일

이름 경내

번호 3799 조회 14

등록일 2005년 10월 04일 20시 51분 17초

인권위 발전기획단에 결함하고 있는 외부위원들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보냈어요.

요지는

발전기획단 논의 과정에서 인권단체 의견 수렴 절차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심도깊은 워크숍 개최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외부위원들 뜻을 모아 함께 제안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의견 들어오는 것 참조해서 향후 행보를 결정하려고 하구요.

전체 외부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않은 않을 것 같네요.

당장 참여연대 이재명 씨만 해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고 결함한 것이어서 집합적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만 팀 회의 자리에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네요.

궁극적으로 인권위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방은 발전기획단에서 빠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with 범용, 정책회의).

발전기획단이 폐쇄적인 논의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더라도 그것은 인권위만의 것일 뿐, 전체 인권진영의 발전과 상관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참고하세요.

=====

|       |   |    |    |
|-------|---|----|----|
| 제목    | [보고]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업무전략팀 현황 보고   |    |    |
| 이름    | 경내  |    |    |
| 번호    | 3832  | 조회 | 15 |
| 등록일   | 2005년 10월 14일 21시 18분 10초   |    |    |
| 관련사이트 | -   |    |    |
| 첨부파일  | <a href="#">업무전략기획안1 검토의견(최종).hwp(17.0 KB)</a> <a href="#">인권위 워크숍제안서 최종.hwp(17.0 KB)</a> |    |    |

1. 회의 내용

\* 1차 회의 (9/13)

- 발전기획단 설립 취지, 업무전략팀 수임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
- 준비회의 성격이라 긴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 이날 사랑방에서는 1차 의견서(발전기획단 구성 대내외적으로 알릴 것, 회의 과정에서 인권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등)를 전달함.

\* 2차 회의 (9/23)

- 업무전략팀 수임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 : 업무전략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 2기 인권위 사명과 업무전략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체화시켜야 할지 등에 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 자리
- 팀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 인권위 내부에서 업무전략안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풀어나가기로 함. 인권위 내부에서 1기 인권위의 한계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내부 변화 의지를 업무전략안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

\* 3차 회의 (10/12)

- 인권위가 마련한 업무전략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 2기 인권위 방향성에 대한 제시 부족하고, 정책/조사구제/교육 등 기능별 업무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됐다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함.
- 이날 사랑방은 2기 인권위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합의 도출을 위해 민간 초청 워크숍 개최를 제안함. 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 제출되었음.
- 또 사랑방은 업무전략안의 전체 틀을 사무국 기능별로 나누지 말고, 2기의 사명과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기능별 과제를 추가로 제시하는 이중 구조로 업무전략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아일랜드 국가인권위 사례 참조).

=> 다음 회의까지 2기 인권위의 핵심과제에 대해 외부위원들 각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기능별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기로 함.

\* 차기 회의 (10/19)

\* 사랑방 제안 워크숍 개최 수용!!!

- : 13일 발전기획단 회의에서 워크숍을 11월 15일 이전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고 함.
- : 2기 인권위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워크숍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단 업무전략팀 내부에서도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므로, 사랑방 의견은 17일 오전까지 제출되어

야 할.

=> 일단 경내와 범용이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추가 의견이 있으면 월요일 상임회의 때 추가하기로 하지요.

\* 기타...

- 범용이 형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큰 힘이 되네요. 의견서를 작성하느라 무지 무지 고생했다우~

- 인권위 초안에 대한 우리 의견서와 워크숍 제안서 첨부하니 함 읽어보세요.

제목 [자료]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논의 현황  
 이름 경내  
 번호 3897  
 등록일 2005년 11월 07일 12시 43분 58초  
 관련사이트 =  
 첨부파일 [준비모임문건.hwp\(57.0 KB\)](#) [준비모임문건2.hpt\(268.1 KB\)](#)

조회 9

지난 목요일 '국가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준비모임이 있었어요.

우려(?)대로 사랑방 사람들이 거의 반을 차지했더군요.

이날 준비모임은

국가인권위 직제개편 주요 방향과 발전기획단 3팀 논의 현황을 공유한 다음,  
 워크숍 때 이루어져야 할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활발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유도는 높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

당일 준비모임에서 공유된 자료 올립니다.

전체 자료는

- 1) 발전기획단 개괄
  - 2) 업무전략팀 초안
  - 3) 위상강화팀 초안
  - 4) 역량강화팀 초안
  - 5) 인권위 직제개편 결과
- 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1-4까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라 관련 자료만 올려드립니다.

이날 참석 못하신 분들 읽어보시구요.

각 네트워크별로 추가 논의를 해주시고,  
 워크숍 참여도 득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덧붙여 이 자료들은 아직까지 초안이고,  
 특히 업무전략팀의 경우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이 도출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를 거치면서 초안이 수정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밖으로 돌리지는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그럼 모두들 수고^^

제목 발전기획단 워크숍 관련 의견서 보냈어요

이름 경내

번호 3898

조회

9

등록일 2005년 11월 07일 12시 45분 33초

관련사이트 :

첨부파일 [워크숍기획안2.hwp\(30.5 KB\)](#)

저랑 범용이형의 문제의식,  
그리고 지난 목요일 인권단체 준비모임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워크숍 구성에 관한 의견을 인권위쪽에 전달했습니다.

아래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제목  | [보고] 발전기획단 워크샵 논의         |    |    |
| 이름  | 승은                        |    |    |
| 번호  | 3912                      | 조회 | 10 |
| 등록일 | 2005년 11월 10일 20시 12분 43초 |    |    |

제목: 발전기획단 워크샵 논의

일시: 2005.11.08

용도: 상임회의 논의용

참조: 발전기획단 담당자(범용, 경내)가 안식월인 관계로 논의 준비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 상임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에 기초해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담당자들에게는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찾으려, 사실 우리에게 논의가 부족한가 하는 회의도 있고, 국가인권위 논의를 하면, 언제나 원론적 얘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도돌이표 상황을 넘기 위해 뭘 해야 할지 계속 벽에 부딪치기도 하지만,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게 중요하고 결국 이런 논의과정이 축적되어야 원론적인 얘기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으리라는 판단합니다. 자료 꼭 읽어오시고, 고민해 오셨으면 합니다. 그럼 '희망찬' 논의를 기대해 봅니다. 국가인권위와 민간단체와의 관계모델에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 대응 관련 분야별 연대사업이나 현안 대응하고 계신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상에 대해 준비해 오셔야 할 듯 합니다.

\* 관련 자료는 앞으로 고집어 놓을게요.

■ 워크샵의 큰 논점 두 가지

2기 국가인권위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2기 인권위의 업무방향, 2기 인권위에 바라는 점-바람직한 국가인권위와 민간단체의 관계 모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 논의 목표

2기 인권위가 뭘 하고 민간단체와 관계모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가능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을 마련해 본다.

■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들

1. 1기 국가인권위 평가

: 2기의 방향을 잡는 데 1기에서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법제도적 개선만으로 인권위의 새로운 지평은 열리지 않는다」 (범용, 2004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1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평가안」 (박래군, 2004년 2/4분기 인권운동사랑방 총회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자료 세 번째)

2. 2기 국가인권위 업무 전략

[참고자료]

2기 국가인권위 업무목표 제안 최종(배경내, 상임활동가 게시판 3838)

2기 국가인권위 업무전략(국가인권위, 상임활동가 게시판 3893, 7일 상임회의에서 배포한 자료)==>국가인권위 최종안을 경내 씨가 올릴 예정

☞ 두 안의 차이를 비교해가며 보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3. 바람직한 국가인권위와 민간단체의 관계 모델

[참고자료]

「법제도적 개선만으로 인권위의 새로운 지평은 열리지 않는다」 (범용, 2004년 한국 인권보고대회)

- 가능한 준비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인권위 대응 관련 분야별 연대사업이나 현안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상 제시하기(각 사업 담당자)

☞ 경내, 범용 씨가 논점 준비해 옵니다.

제목 [필독자료] 발전기획단 논의관련  
 이름 승은  
 번호 3914 조회 11  
 등록일 2005년 11월 11일 14시 33분 43초  
 관련사이트 :  
 첨부파일 [\[자료\]국가인권위토론수정글최종\(범용\).hwp\(42.5 KB\)](#) [\[자료\]혈력거부1년평가\(범용\).hwp\(44.5 KB\)](#)

월요일 상임회의에서 논의할 주제의 참고자료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       |  |    |    |
|-------|--|----|----|
| 제목    | [참고자료] 발전기획단 논의 관련2  |    |    |
| 이름    | 경내   |    |    |
| 번호    | 3915   | 조회 | 14 |
| 등록일   | 2005년 11월 11일 15시 38분 21초  |    |    |
| 관련사이트 | -  |    |    |
| 첨부파일  | <a href="#">업무목표제안_최종.hwp(19.5 KB)</a> <a href="#">업무전략팀수정안.hwp(16.0 KB)</a> |    |    |

창경궁 들놀이 사진 넘 예쁘네요\*\*\*

월요일 회의 때, 국가인권위 방향과 관련한 논의에서 참고할 자료예요.

하나는 우리가 국가인권위에 제안한 업무목표제안서이구요,  
또 다른 하나는 발전기획단 업무전략팀 최신 수정안이에요.

사실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거의 포함된 셈인데요...  
어쨌든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논의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와 민간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계속 고민이 드네요.

어쨌든 월요일까지 논점을 잡아갈게요.

내일 반딧불 준비때문에 정신이 없겠네요.

저는 3시 인권교육 집담회 갔다가 은주 등과 함께 저녁 상영 때 광화문으로 갈게요~

그럼 내일 봐용~

래군님 날김 2005.11.14 00:28

인권회의 운영진의 요청은 일단 지난번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인권회의 단체들에 회람해 달라는 것과 함께 자료만을 회람하는 것으로는 단체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인권단체들이 정리할 입장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 쟁점을 정리하자는 것임. 그리고 걱정은 사랑방이 제기했는데, 단체들이 참가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임. 상임회의 때 의논합시다.

|              |  |           |   |
|--------------|--|-----------|---|
| <b>제목</b>    | <b>[참고자료] 인권위! 인권발전의 견인차인가, 걸림돌인가?</b> |           |   |
| <b>이름</b>    | 새처럼                                    |           |   |
| <b>번호</b>    | 3925                                   | <b>조회</b> | 3 |
| <b>등록일</b>   | 2005년 11월 14일 11시 07분 21초              |           |   |
| <b>관련사이트</b> | =                                      |           |   |
| <b>첨부파일</b>  | <a href="#">국가인권위(최종).hwp(39.0 KB)</a> |           |   |

먼저 이 글을 올릴 때는 이미 상임회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군요.  
발전기획단 논의에 참고하라고 미리 올리려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혹시 논의가 끝난 이후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애초 월간 사랑 원고의 일환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방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가능한 제 수준의 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인권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멈춘 지 1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월간 사랑의 원고를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었는데,  
평소 별로 잘 해주지 못했던 래군이 형이 부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는 '내가 왜 이 원고청탁을 수락했을까?' 계속 후회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마감시간을 훨씬 넘겨서 이렇게 글을 완성했군요.  
이 글은 사전에 은아 누나와 경내 씨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제 거칠디 거친 초고가 이 정도로나마 성세해진 것은 다 은아 누나와 경내 씨의 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은 다 제가 부덕한 소치이지요.

래군이 형!  
원고마감일을 훨씬 넘긴 것뿐만 아니라, 원고분량도 훨씬 넘겼는데 관찰쫓쫓.  
어쩔거나 최선을 다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그럼 파일로 첨부합니다.

## 국가인권위! 인권발전의 견인차인가, 걸림돌인가?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출범한 지 이제 4년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테러 방지법안, 이라크전, NEIS, 국가보안법, 비정규직법안 등 굵직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의미있는 권고를 땡땡 때려대곤 했다. 어떠한 외부의 감시에 대해서도 굳게 닫혀있던 구금시설의 철문을 면전진정, 방문조사 등을 앞세워 과감히 열어젖혔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동성애 문제를 건드리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일제시대부터 편견으로 차별받아온 한센인의 문제를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국제인권규범을 준거로 인권의 보호와 향상만을 전담하는 국가기구'로서 인권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들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인권위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인권위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자신의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럭저럭 잘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혹자는 국가기관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인권위는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후한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평하기도 한다. 이쯤해서 보면 인권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작 그 동안 묵묵히 인권침해에 저항하고 인권위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산파 역할을 했던 인권단체들로부터는 냉소적인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중요재판에의 의견개진 등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고, 의미있는 권고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연속정벌 기각 등 대단히 보수적이고 타협적인 판단을 한 경우도 많다고 비판해 왔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옹호를 위한 동반자로서 인권단체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원하거나 동원하는 식으로 인권옹호의 업무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을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광범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인권위가 시민사회 내에 자신의 우군을 형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항상 국가기관의 견제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권위가 자신의 권고적 효력을 국가기관에 강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권위는 기존의 현실보다는 조금 앞으로 나아갔지만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항상 부족한 보수적인 판단과 소극적인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요한 국가정책은 항상 계급간의 타협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단체들로서는 인권의 최저기준에 불과하지만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인권의 최대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민중들의 힘이 국가권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많은 경우 국가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잘해야 인권위의 권고만큼 수용하는 형태로 자신의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그렇기에 인권위의 보수적인 판단과 소극적인 업무 수행은 어찌 보면 인권의 원칙에 턱없이 모자라는 국가정책에 면죄부를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권단체들의 보다 높은 인권적 요구를 철부지 집단의 비현실적인 투정으로 비치게 만든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인권위가 오히려 인권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인권위는 인권발전의 견인차인가, 걸림돌인가? 이에 대한 답은 논리적이거나 선형적으로 어느 하나를 택하는 식은 아닐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만을 전담하는 설립목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의 견제에 순응하여 자신의 권고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시점부터 인권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인권위가 인권발전의 견인차와 걸림돌이라는 모순된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은 인권단체들에게 넘어온다. 사실 국가기관이 스스로의 기득권과 편의를 포기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고행의 길을 택한 역사는 없었다. 이는 인권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견제와 인권의 원칙 사이에서 적절히 줄타기를 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유혹을 항상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권의 파문을 그럴 수 있도록 인권위를 일깨우고 바로 세우는 일조차 애초부터 인권단체의 몫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인권위에 대한 대응 범위와 수위에 대해서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물론 같은 단체 내의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인권위에 대한 전면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 인권위를 운동의 기획에서 하나의 도구로만 활용하자는 입장,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전제 아래 인권위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입장 등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편차를 좁힐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은 무엇일까?

나는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인권위라는 존재로부터 기인한다. 첫째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목적을 인권단체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가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면 할수록 인권단체들은 활동의 과정에서 인권위와 필연적으로 조우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인권위의 감시 대상은 인권단체들의 활동 대상과 겹친다. 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전통적으로 인권단체들이 담당해 왔던 역할이

다. 셋째, 인권교육의 전형이 만들어지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인권위는 인권교육을 개척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인권단체들에게도 유효한 임무이다.

이미 현실에서는 NAP, 차별금지법 등 인권위가 다루고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발전기획단, 태스크포스팀, 영역별 전문위원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다양한 층위에서 인권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인권위 진정은 다양한 운동의 기획 중 하나로 정착했으며, 비록 권고적 효력이지만 많은 인권위가 관심있는 인권사안에 대해 의미있는 입장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 맺기를 강제받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인권단체들과 인권위와의 '운명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만큼, 인권위가 국가기구로서 갖는 한계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즉, 인권위는 결코 기존 질서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다. 현 체제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권의 최대치를 실현하는 데 다른 국가기관보다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인권의체를 새롭게 발굴하고 인권주체를 조직하며 인권기준을 좀더 급진화하는 일들은 여전히 인권단체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그렇다고 인권위를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사회에서 다른 국가기관들은 해방의 혼돈과 전쟁이라는 비상식의 시기에 출발하여 장기간의 개발독재 과정을 거치면서 민중탄압과 인권억압의 관행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다. 또한 오랜 관료행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문턱이 아주 높고, 참여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매우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성찰 속에서 유엔의 권고를 시발점으로 하고 있고, 한국사회에서는 인권단체들의 처절한 투쟁 덕에 비교적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실제 인권위의 구조와 기틀은 인권 출신 인사들이 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관료적 행정을 강행하기가 태생적으로 어려운 것이 인권위이고, 무엇보다 출범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보다 용이하다.

따라서 인권위를 다른 국가기관과 동일시하며 인권위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관과 대동소이하게 억압적 기구로 되는 결과를 앞당기게 된다. 설령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인권단체들의 염원을 배신하고 인권발전의 걸림돌로 기능하면서 다른 많은 국가기관들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면, 이는 인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실패한 결과일 것이다.

인권위는 지금까지 인권단체들이 담당해 왔던 상당한 몫을 자기 업무로 설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권위가 국가기구로서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인권단체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형식적인 기구로 안주하지 않고 원래 부여받은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인권기준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내고, 이에 기반하여 보다 급진적인 요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애초의 문제로 되돌아가자. 인권위는 인권발전의 견인차인가, 걸림돌인가? 그것은 인권단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단체들은 어떻게 인권위를 인권발전의 견인차로 만들 것인가?

관건은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개입틀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고, 여기서 핵심은 인권위 업무의 사후대응 수준을 넘어서 구상과 집행, 그리고 평가의 전 과정에 인권단체들이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개진 통로를 정례화하고, 영역별로 일상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권위에 대한 개입을 전면화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인권단체들은 인권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속에서 인권위가 담당해야 하고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인권위에 적극 요구할 수 있는 구조와 발언력을 획득하는 것 못지않게, 여전히 인권운동의 몫으로 남아있는 역할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법 논리를 넘어서 인권의 논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인권위가 적극 나서야 할 인권 의제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내는 것, 인권위에 접근하기 힘들고 인권위도 접근하지 않는 주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개별 진정이나 개별 법률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 자체에 균열을 내기 위한 운동을 기획하는 것 등.

따라서 전체 운동으로부터 더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역량을 투입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인권위 대응과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대한 활용과 대응 전략을 늘 염두에 두고 운동을 기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권위와 관련하여 인권단체들에게 최소한으로 요청되는 의무일 것이다.

<끝>

|       |  |    |   |
|-------|--|----|---|
| 제목    | [회의자료] 논점정리-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관계 어떠해야 하나?               |    |   |
| 이름    | 경내   |    |   |
| 번호    | 3929   | 조회 | 5 |
| 등록일   | 2005년 11월 15일 14시 38분 51초                          |    |   |
| 관련사이트 | =  |    |   |
| 첨부파일  | <u><a href="#">인권위와의관계_051114.hwp(17.0 KB)</a></u> |    |   |

어제 상임회의 때 드렸던 자료입니다.

아래 범용이형이 올린 원고 보니, 제가 어제 드렸던 자료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네요.

어제 제가 만든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다른 단체와도 공유하고,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요. 범용이형 등등과 더 얘기를 나눠보고 보완해 보도록 하지요.

일단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2005.11.14 상임활동가 회의

주제: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대응 논의

- (1) 향후 3년간 국가인권위 방향 설정
- (2)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관계 구축

##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관계,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나?

작성: 경내

### ■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특성

- (1) 국가의 인권 보장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반성 장치  
: 행정, 입법, 사법 모두에 대한 견제 통로를 마련하고 있음.
- (2) 기존 '국가'로부터 지위와 권한이 독립된 국가기구(3권분립의 원칙 바깥에 존재하는 기구)인 동시에, 민간의 협력과 지지를 받아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기구  
⇒ 강력한 권력을 지닌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의 도덕적 지지와 협력을 적극 구할 수 있어야 함. 국가기구이면서도 민간의 힘으로 국가기구를 견제한다는 '모순'을 아고 있는 기구.
- (3) 국내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이면서도 내용상 국제인권규범에 의존하는 준국제기구  
⇒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적 효력을 바탕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법·제도·관행을 구축하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이끌어냄.
- (4) 신속하고 접근이 쉽고 저렴한, 대안적인 준사법적 권리구제 기구  
⇒ 그렇기 때문에 기본 사법제도에 접근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접근하기 쉬운 기구로서 자리잡아야 함.
- (5)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기 힘든 '희색영역의 인권침해'에도 개입하여 인권의 논리를 확장하는 기구  
⇒ 법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냄.
- (6)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전국가적 인권의식 향상을 이끌어내는 기구  
⇒ 교육과 홍보, 인권 지침의 공표, 주요 사건 결정의 언론 공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인권의식의 향상을 이끌어냄.
- (7) 사회적 다원성을 조직구성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세력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  
⇒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구로서 조직 구성과 구성절차에서부터 다원성을 반영해야 함.

### ■ 국가인권기구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위와의 관계 구축

-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통제가 요구됨.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구가 다른 국가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운동단체와는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인권의 담론을 체계내적으로 제한하려는 동인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마련임. 국가인권위는 현 체제 내에서 수용가능한 인권기준의 최대한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기구로서 사고되어야 함.

- 따라서 국가인권위와 민간과의 역할 구분을 뚜렷이 해 나가면서 인권위 통제 통로를 확보해내야 하는 것임. 물론 인권운동 진영이 한정된 역량을 인권위 통제에 일정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위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일 것임. 인권위를 견인할 만한 운동역량이 독자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위 대응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운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므로 자기 운동의 현 수준에서 인권위가 담당해야 할, 그리고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인권위에 요구하고 견인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 ■ 주요 논점

### 1) 국가인권위 대응은 반드시 필요한가

- 국가인권위 대응의 필요성은 당위적 인식에 그치고 있을 뿐,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를 활용하기만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가 자신의 운동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강한 대응으로 이어지곤 함.

- 인권운동이 현재 국가인권위와 어떤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볼 필요가 있음.

예> 인권위→인권운동 : 전문위원 참여 요청, 의견 조회, 간담회 개최, 공동(기획·용역)조사 요청 등

인권운동→인권위 : 진정, 의견 발표 요구, 현장조사 요구, 각종 간담회 개최 요구, 내담자들에게 인권위를 권리구제기구로 소개하는 상담활동, 기자회견장을 인권위 앞으로 잡으면서 인권위를 상징화하는 활동 등

⇒ 현실적으로도 국가인권위가 우리 운동의 기획과정에서 주요한 하나의 조건으로 이미 고려되고 있다면, 보다 체계적인 국가인권위 대응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음.

### 2) 국가인권위 대응은 적극 협력과 비판 둘 중 하나인가?

- 흔히 국가인권위에 적극적 대응을 강조하는 주장은 인권위에 적극 '협력'하자는 주장으로만 제한적으로 이해되곤 함. 또 흔히 국가인권위에 '무관심'한 입장이 인권위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오해되기도 함. 국가인권위에 개입할 틀을 확보해내고 그 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원래 비판과 견제를 위한 것이나 공식적으로는 '협력'으로 불리어지곤 함. 개입틀에 대한 참여가 결과적으로 견제의 힘을 잃어버린 채 협력과 종속으로 이어질 우려도 당연히 있음.

### 3) 국가인권위와 인권운동 역할의 차이?

-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국가인권위와 인권운동의 역할과 궁극적 지향은 다를 수 있음.

- 국가인권위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국가인권위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든 일, 국가인권위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인권운동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과 함께 △인권운동 고유의 역할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음. 인권운동 고유의 역할로는 법 논리를 넘어선 인권의 논리를 확장, 진보적으로 재구성하는 역할, 인권위가 나서야 할 인

권의제들을 발굴해내는 역할, 권리구제장치에 접근하기 힘든 인권 주체들을 교육하고 주체화시키는 역할, 개별 정책이나 사안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에 균열을 내는 역할 등을 들 수 있음.

예) 인권교육의 경우

○ 국가인권위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 : 학교인권교육의 제도화, 공무원 인권연수과정의 도입·지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지원(민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등

○ 국가인권위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든 일 : 예를 들어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일에 인권운동의 국가기관 감시, 대응 활동은 녹아 들어가야 함. 이 분야는 인권교육 활동가보다 해당 분야 인권활동가의 현장 경험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국가인권위가 결코 할 수 없는 일 : 국가인권위가 책임지는 교육, 국가인권위의 힘을 빈 교육에서는 내용상의 한계를 가질 수 있음. 구조의 문제보다 인성을 중요시한다거나 경직된 법교육에 그칠 수 있어 인권교육의 진보성과 현장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게다가 '제도' 혹은 '공공영역' 바깥의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 인권주체로 조직화해내는 일은 인권운동 고유의 몫이라고 볼 수 있음.

#### 4) 인권위에 요구할 개입들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인권운동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관철시키고, 인권위가 인권운동이 발굴하는 인권의제와 인권 현안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예>

○ 인권단체와의 간담회·워크숍 정례화 : 연초, 5월 내년도 예산안 마련, 연말 사업 평가와 사업계획 마련 시 인권단체 의견 수렴

○ 인권위 직원 인권(감수성)교육에 인권단체 활동가 초청 : 인권활동가들의 경험과 전문성, 감수성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위는 결코 인권옹호기구로 체역할을 할 수 없음.

○ 영역별 협의체 건설 : 이는 인권위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운동단체들의 참여들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관계맺기의 방식이라고 봄. 또 인권위 전체 사업방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도 개별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영역별 협의체를 통해 집합적 의견 개진이 더 효과적임.

○ 인권지표·인권지침 개발시 인권활동가 참여 요구 : 인권지표나 지침 개발에서 인권활동가들의 현장 경험은 반드시 녹아들어가야 함. 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향후 인권교육과 조직화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 만큼 개입들을 적극 확보해내야 한다고 봄.

○ 인권논리 개발을 위한 사안별 집담회 개최

○ 기획단계에서부터 인권활동가 참여 보장 등

|     |                            |    |    |
|-----|----------------------------|----|----|
| 제목  | [보고] 발전기획단 관련 최근 상황과 우리 입장 |    |    |
| 이름  | 경내                         |    |    |
| 번호  | 3930                       | 조회 | 14 |
| 등록일 | 2005년 11월 16일 00시 35분 12초  |    |    |

아마 사무실에서 발전기획단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 이미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워크숍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이고요.

국가인권위쪽에서 워크숍을 그대로 진행되어야 할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물어왔어요. 급박한 상황이라 모두의 의견은 듣지 못했구요~

정책담당자, 범용, 래군이형 등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달라진 위상의 워크숍은 거부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사랑방 입장은 정리됐습니다.

다만 다른 단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권회의 운영진을 대표해 이창수 씨가 단체들의 의견을 묻는 메일을 15일 밤에 돌렸어요. 읽어보니 너무 내용이 부족해서 제가 추가 메일을 다시 보냈습니다.

아래 내용이 메일 내용이에요. 읽어보시고 최근 상황, 우리 입장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

|     |  |    |    |
|-----|--|----|----|
| 제목  | [보고] 국가인권위 최근 사항 보고(NAP, 발전기획단관련 24차 전원위 결정) |    |    |
| 이름  | 승은   |    |    |
| 번호  | 3982   | 조회 | 20 |
| 등록일 | 2005년 12월 01일 22시 17분 57초                    |    |    |

1. NAP 관련

- 24차 전원위(11/28)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지 못해 NAP권고안 의결도 진행되지 못함. 전원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차례 더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추어 발표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내부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논의를 숙성시키자는 것인데, 실제로는 논치를 보는 것이죠.

-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마도 NAP에 책정된 예산 중 담당자인 정영선 씨와 박병수 씨 선에서 제안된 것 같고 인권단체들의 열정에 고맙다는 나름의 의지를 갖고 있는 듯함. 전에 래군 선배랑 통화하면서 검토의견서를 분야별로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 알게 됐고, (그 정보에 기초해)박병수 씨는 정아 경내 온아 미류 래군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이었음. 다른 검토의견을 준 사람들에게도 제안한 것 같고, 박병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처럼 얘기해서 가능한 빨리 결정해달라는 것임. 발자는 의견에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지불로 생각하자는 것이고 받지 말자는 것은 애초 자문료를 영두에 두고 의견을 준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관행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음. 또한 대표 집필을 했더라도 소속단위의 의견을 취합한 과정이 있는데 이걸 개인에게 주는 것도 이상함. 이에 대한 답글을 달아주었으면 좋겠음.

2. 발전기획단

- 사무처가 23차 전원위(11/14)에 상정한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활동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향후 발전기획단 활동 추진방향을 정해서 다음 전원위에 보고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11월 15일 22차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음.

- 상임위에서는 ①국가인권위 발전전략기획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차기 전원위에서 구성하고, ②특위 위원장은 정책소위원장이 맡고 나머지 특위 위원은 차기 전원위에서 결정하고 ③현 발전기획단 해체 여부를 포함하는 특위 운영방식 및 실무보좌기구 구성등은 특위가 구성된 이후 특위에서 논의하고 ④특위 구성 시까지 발전기획단 활동 결과물은 특위에 제출하고 ⑤11월 21일로 예정된 워크숍은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으며 사무처가 특위에 상정할 사무처안을 작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 연석회의는 워크숍 위상의 변화에 대해 불참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함.

- 24차 전원위에서 특위구성원으로 정책소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의 상임위원들(정강자, 김호준)과 비상임위원 김만홍, 신혜수 위원이 담당하기로 함.

|     |                           |    |    |
|-----|---------------------------|----|----|
| 제목  | 발전기획단 해산 결정 내렸답니다         |    |    |
| 이름  | 경내                        |    |    |
| 번호  | 4023                      | 조회 | 15 |
| 등록일 | 2005년 12월 16일 17시 50분 59초 |    |    |

지난 14일(수) 발전기획안 관련, 인권위원 5명으로 구성된 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네요.

발전기획단에서 그동안 마련한 '발전기획안 초안' 보고가 있었고, 특위 위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 의미있는 자료 만든 것 같다 등등의 말이 있었답니다.  
사전 검토 시간이 없어 자세한 논의에 들어가지는 못했구요.

특위의 명칭, 작업방식, 작업기한 등은 다음 회의에서 정하기로 하고, 12월 중 2회 더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3개팀 중 업무전략기획팀이 마련한 초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구요.

<특위 실무보좌기구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 발전기획단 해산 - 명확한 이유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발전기획단은 사무처 초안 작성을 위해 구성된 팀이니까 해산하기로 했다는군요.

: 사무처에서 특위 참석 범위를 단장, 3개 팀장, 간사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실무보좌는 간사 3명. 임송만 전임.

이상입니다.

평가가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월요일에 평가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       |   |    |    |
|-------|---|----|----|
| 제목    | [논의안건]발전기획단 활동 평가                             |    |    |
| 이름    | 경내  |    |    |
| 번호    | 4052  | 조회 | 19 |
| 등록일   | 2005년 12월 23일 19시 25분 39초                     |    |    |
| 관련사이트 | =   |    |    |
| 첨부파일  | <a href="#">발전기획단평가자료_051226.hwp(28.0 KB)</a> |    |    |

특위에서 발전기획단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사랑방 발전기획단 참여 활동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범용과 제가 논의를 거쳐  
지난 활동에 대한 개략적 평가 지정과 향후 대응과제를 뽑아 봤습니다.

월요일 상임회의 때 얘기해보도록 하죠.

=====

051226 상임활동가회의

발전기획단 활동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1. 발전기획단 참여 결정(05/09/05)의 취지

1) 국가인권위 2기 전략 마련 자체의 중요성  
: 2기 혁신 작업의 구체화 일환으로 파악

2) 국가인권위와의 바람직한 관계 전형 창출  
: 기획단계에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사랑방의 비판이 수용된 것이면서 국가인권위 전체의 전략과 방향을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최초의 자리로서 전형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음.

2. 전반적 평가 - 발전기획안과 인권운동진영 관계를 중심으로

1) 절반의 성공

: 11/14 전원위원회, 11/15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발전기획안이 휘청거리게 뚱으로써 1달 정도 시간을 낭비하면서 끝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그러나 1달 반 정도 가량의 논의 자리를 통해 2기 업무전략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만함.

: 결국 우리가 제안했던 워크숍이 무산되었지만, 발전기획단 차원의 워크숍 개최 결정까지 이끌어내면서 민간 인권운동진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는 인권위 내부 태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

: 이와 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에서 워크숍 준비모임을 제안하는 등 인권단체 내부에서도 인권위 대응의 고민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음.

2) 절반의 실패

: 최종적으로 워크숍 개최가 무산되고, 업무전략을 비롯한 2기 인권위 발전기획안이 '특위'라는 폐쇄적 공간에서만 논의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음.

: 이에 따라 2기 인권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나아가 인권위와 인권단체 간의 바람직한 관계의 전형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음.

3. 그 외 평가 지점

[민간 참여위원과 인권운동진영]

: 대다수 민간위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한 만큼, 민간위원 공통의 틀을 만들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났음. 사랑방이 제안한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외부 민간위원들이 인권운동진영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어려운 조건임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외부 민간위원들 사이의 구심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나 민간위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통제력 확보 필요성 혹은 가능성 문제는 사례마다 다르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특위에 대한 대응 활동]

1) 11/25 인권회의 성명서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는가'의 적절성 여부

: 애초 사랑방 등은 전원위와 상임위의 결정을 강력 비판하면서 해명의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예정대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발전기획안 논의 내용을 계승할 것을 요구하자고 제안하였음. 이에 대해 이창수 씨는 특위와 전면 맞장을 떠야 하는 시기에 워크숍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특위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음. 이에 따라 11/24 인권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워크숍 개최 요구를 담은 문장을 삭제한 채로 성명서가 나가게 됨.

: 이 성명서는 그날 위원장과 사무총장실에만 전달되고 상임비상임 위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음. 성명에 담긴 내용을 전달하거나 관철시키려는 추가 행동도 조직되지 못함.

=> 워크숍 개최 요구가 빠진 상태에서 수위를 낮춰 인권회의 차원의 성명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는가? 인권회의가 항의주의를 채택한 만큼 최대한의 항의 수준만큼 성명을 내는 것이 좋았는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명이 아니라면 아예 성명을 내지 말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2) 외부위원으로서의 사랑방이 독자적 행보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담당자였던 경내는 인권회의 차원에서 특위를 상대로 한 활동이 기획되기 어렵고 워크숍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조건 속에서 업무전략안을 잘 만드는 것이 그다지 의미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음. 또 사랑방 독자적으로 상임위원을 항의방문한다거나 워크숍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회의의 행보에서 벗어나는 것인 만큼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반해 사랑방의 또다른 담당자(?)였던 범용은 사랑방 독자적으로라도 상임위원 항의방문을 조직하거나 워크숍 개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자는 입장이었음.

4. 향후 과제

1) 발전기획안 최종안 내용 점검

: 특위 차원에서 발전기획안 최종안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야 함.

2) 워크숍 개최 요구 등 추가 대응 여부

: 현재 특위는 1월말 정도까지 활동시한을 잡고 움직일 수 있음. 사랑방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하다고 결정되거나 혹은 인권회의 차원에서 워크숍 개최를 추가로 요구하자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워크숍 대응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함.

범용이형, 혹 잘못 정리된 게 있으면 의견 주세요. 바로 고칠게요~

세처럼님 남김 2005.12.24 23:52

잘못 정리되었다기보다는 제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네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상임회의 때 구두로 부연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어쨌든 논의안건 정리하느라 수고했어요.

경내님 남김 2005.12.26 01:51

맞아요. 아무래도 형의 의견을 적절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지요. 내일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발전기획단 활동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 1. 발전기획단 참여 결정(05/09/05)의 취지

#### 1) 국가인권위 2기 전략 마련 자체의 중요성

: 2기 혁신 작업의 구체화 일환으로 파악

#### 2) 국가인권위와의 바람직한 관계 전형 창출

: 기획단계에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사랑방의 비판이 수용된 것이면서 국가인권위 전체의 전략과 방향을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최초의 자리로서 전형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음.

### 2. 전반적 평가 - 발전기획안과 인권운동진영 관계를 중심으로

#### 1) 절반의 성공

: 11/14 전원위원회, 11/15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발전기획단이 휘청거리게 됨으로써 1달 정도 시간을 낭비하면서 끝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그러나 1달 반 정도 가량의 논의 자리를 통해 2기 업무전략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만함.

: 결국 우리가 제안했던 워크숍이 무산되었지만, 발전기획단 차원의 워크숍 개최 결정까지 이끌어내면서 민간 인권운동진영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는 인권위 내부 태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

: 이와 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차원에서 워크숍 준비모임을 제안하는 등 인권단체 내부에서도 인권위 대응의 고민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음.

#### 2) 절반의 실패

: 최종적으로 워크숍 개최가 무산되고, 업무전략을 비롯한 2기 인권위 발전기획안이 '특위'라는 폐쇄적 공간에서만 논의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음.

: 이에 따라 2기 인권위의 활동 방향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나아가 인권위와 인권단체 간의 바람직한 관계의 전형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음.

### 3. 그 외 평가 지적

#### [민간 참여위원과 인권운동진영]

: 대다수 민간위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참여를 결정한 만큼, 민간위원 공통의 틀을 만들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났음. 사랑방이 제안한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

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외부 민간위원들이 인권운동진영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어려운 조건임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외부 민간위원들 사이의 구심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나 민간위원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통제력 확보 필요성 혹은 가능성 문제는 사례마다 다르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특위에 대한 대응 활동]

1) 11/25 인권회의 성명서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는가'의 적절성 여부

: 애초 사랑방 등은 전원위와 상임위의 결정을 강력 비판하면서 해명의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예정대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발전기획단 논의 내용을 계승할 것을 요구하자고 제안하였음. 이에 대해 이창수 씨는 특위와 전면 맞짱을 떠야 하는 시기에 워크숍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특위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였음. 이에 따라 11/24 인권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워크숍 개최 요구를 담은 문장을 삭제한 채로 성명서가 나가게 됨.

: 이 성명서는 그날 위원장과 사무총장실에만 전달되고 상임·비상임 위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음. 성명에 담긴 내용을 전달하거나 관철시키려는 추가 행동도 조직되지 못함.

=> 워크숍 개최 요구가 빠진 상태에서 수위를 낮춰 인권회의 차원의 성명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는가? 인권회의가 합의주의를 채택한 만큼 최대한의 합의 수준만큼 성명을 내는 것이 좋았는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명이 아니라면 아예 성명을 내지 말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2) 외부위원으로서의 사랑방이 독자적 행보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담당자였던 경내는 인권회의 차원에서 특위를 상대로 한 활동이 기획되기 어렵고 워크숍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조건 속에서 업무전략안을 잘 만드는 것이 그다지 의미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음. 또 사랑방 독자적으로 상임위원을 항의방문한다거나 워크숍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회의의 행보에서 벗어나는 것인 만큼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반해 사랑방의 또다른 담당자(?)였던 범용은 사랑방 독자적으로라도 상임위원 항의방문을 조직하거나 워크숍 개최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자는 입장이었음.

#### 4. 향후 과제

1) 발전기획안 최종안 내용 점검

: 특위 차원에서 발전기획안 최종안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야 함.

2) 워크숍 개최 요구 등 추가 대응 여부

: 현재 특위는 1월말 정도까지 활동시한을 잡고 움직일 수 있음. 사랑방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하다고 결정되거나 혹은 인권회의 차원에서 워크숍 개최를 추가로 요구하자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워크숍 대응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함.

제목 2기 인권위 업무전략기획안-전원위 상정안건

이름 경내

번호 4152 조회 17

등록일 2006년 01월 23일 16시 24분 49초

관련사이트 -

첨부파일 전원위상정안건.hwp(182.5 KB)

국가인권위 임송씨가 예전 외부위원들에게 메일로 보내왔어요.

지금 전원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요,  
일단 참고하시라고 업무전략기획안을 올려둡니다.

|       |                              |    |   |
|-------|------------------------------|----|---|
| 제목    | [보고] 인권위 전원위 방청 기록           |    |   |
| 이름    | 초화                           |    |   |
| 번호    | 4154                         | 조회 | 9 |
| 등록일   | 2006년 01월 24일 21시 04분 27초    |    |   |
| 관련사이트 | -                            |    |   |
| 첨부파일  | 060123_전원위_방청기록.hwp(25.0 KB) |    |   |

상임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운영 규칙 변경과 업무전략기획 최종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발언본도 같이 올립니다. 읽어 보시면 위원들의 성향을 아는데 도움이 될 거 같네요.

인권위 전원위 방청기록

2006. 1. 23

<의결안건>

1. 운영규칙 개정 : 상임위 강화

① 주요 골자

- 정책위 기능을 상임위가 흡수
- 상임위가 긴급현안에 대해 의견표명 및 권고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로 일원화
- 상임위 주1회 개최
- 상임위 심의, 의결안건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건 전원위에 회부

② 개정이유 : 위원회의 업무혁신을 위한 사무처의 직제개편과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상임위가 정책위의 기능을 흡수하고, 각 소위원회가 사건관련한 법령, 정책 등에 대한 의견표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사건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③ 전원위에서 사무처가 3가지 안에서 위의 안으로 결정했구요. 정책소위가 없어지니까 소위 위원들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소위는 침해구제를 1, 2로 나누고 차별소위는 어떻게 할 지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소위인 최금숙 의원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폐지를 주장했고, 김호준 의원은 소위를 바꿔주지 않으면 보직을 내놓겠다고 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위원들은 업무의 과중에 대해 주로 호소했고, 상임위로 권한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2. 보상금 지급규칙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상임위"로 변경되었습니다.

<논의>

1. 업무전략기획안

발전기획특위가 발전기획단의 전략기획을 가지고 7차례 논의를 했구요. 최종안을 내놓았습니다. 경내 씨가 올려 놓은 것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 중에서 아래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① "비전"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 부분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으로 바꿀지 여부 : 토론 결과 "모든 사람의 인권..."으로 결정

<위원별 발언내용>

최금숙) 비전과 인권위 목적은 다른가? 2기 방향이 소수자 보호이지만 자유권과 사회권의 선택처럼 보인다. 국내 여건 고려해야 한다.

사무처) 3년 기획은 인권위법의 틀 안에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다. 항구적 목표는 '모든 사람 정강자) 비전과 사명은 단기 사항 아니다.

사무처) '사람이 사랑답게'에서 다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들어반복이다. 구체화가 필요하다. 구체적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바로 인권의 문제이다.

이해학) 비전은 항구적일 필요 있다. '모든 사람'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다(황당) 권력의 남용에 의해 피해 당한 소수자의 보호가 인권위의 존재의의이고, 때문에 단기적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이다.

나천수) 인권위는 국법질서와 별개 존재 아니다. 인권위 목적에서 벗어날 필요없다. 2기 인권위 정책 방향에 구속될 필요없다. 사회권 뿐 아니라 자유권까지 강조해야 한다. 당연히 '모든 사람의 인권'이라고 해야 하고 5대 목표도 지나치게 사회적 약자, 사회권 강조하고 있다.

김호준) 비전은 커야 하는데 '사회적 약자'는 축소 지향이다. 사회반응이 편가르기대로 나올 수 있다. 소수자는 5대 목표의 첫번째인데 비전까지 그렇게 가면 중복이다. 농민사망 사건때 전의경 인권도 얘기되었다.

위원장) 소수자로 가면 사회권 강조로 보이는 건가? 자유권 제외로 보일 수 있는가?

원형은) 항구적인 것은 '모든 사람'으로 충분하다. 단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소수자'로 가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문구이다.

김만홍) 제3의 안이 없다면 가결하자.

사무처) 이는 세상에 대한 비전+인권위가 앞으로 뭐하겠다는 비전. 두 가지로 보아야 한다.

위원장) '모든'이 꼭 들어가야 하나?

사무처) 특별히 문제없으면 '모든 사람'으로 가도 된다.

이해학) 정체성의 문제이다. 인권위 분명하게 방향 정하는 거 필요하다. 국민 비위 맞추는 거 아니다. 미래를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

최영애) '모든 사람'으로 해도 정체성 해하지 않는다. 일반, 보통, 전반적 질적 향상이 인권위 목표다. '소수자' 넣지 않으면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거 아니다.

정인섭) '모든 사람'이 맞다.

② '사명'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표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다른 문구로 바꾸기로 결정

<위원별 발언 내용>

정인섭) 국제인권규범이 먼저 가야함.

최금숙) 헌법이 먼저다

김호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 인권위다. 국민들 국가 정체성 흔들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언제 인권위가 헌재 결정 수용했나?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정강자) 헌법과 헌재의 결정을 같은 수준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헌법과 국제기준에 충실하게 결정하고 있다. nap 권고와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대목의 발언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과 국제기준으로 순서가 맞다.

정인섭) nap보다 불쾌하다. 헌법이 앞이다.

③ '사명'에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이 기준을 실현"에서 헌법과 국제기준의 나열순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

<위원별 발언내용>

나천수) 선의로만 읽히지 않는다. 용어 적절치 않다. 구체적 권한이 가능하냐?

위원장) 뭐가 문제인가? 더 좋은 문구가 있나? 특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

사무처) 전략문건인데 더 늦출 수 있는 문제 아니다. 특위에서 결정하면 좋겠다.

이해학) 특별한 일 없으면 특위로 넘기지 말고 지금 결정하자. 이대로 통과하고 세밀한 워딩만 특위가 하자

위원장) 내용은 살리고 문구는 특위로 넘기자.

사무처) '모든 권력 감시'는 안쓴다는 거 확인해 달라. 모든 권력을 감시하는 건 마땅'당' 아닌가? 그런데 웬지 썩 표현같다고 생각하는바 있는 거 같다.

최영애) 특위의 거의 모든 위원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전원위로 가져왔다.

나천수) 자극적이고 영포하는 듯한 느낌이 걱정이다. 교압적인 모습을 자극적으로 과시할 필요없다.

없애는 거 좋은 거 같다. 원칙이 무색하지 않게 무난하게 나가는 게 좋다.

위원장) 취지는 살리고 워딩은 바꾸자는 의견으로 보인다.

김호준) '차별시정'을 강조할 필요 이다. 새로운 안으로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구체화 할 필요 있다. 이 문구는 힘이 있지만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

위원장) 특위로 넣는다. 취지 살리고 문구 수정하는 거다.

제목 [보고] 인권위 인권증진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이름 새처럼  
 번호 4259 조회 7  
 등록일 2006년 02월 24일 12시 07분 20초

어제 임송 씨와 통화를 했는데,  
 인권위 인권증진 행동계획(업무전략기획)안이  
 다음주 목-금 정도에 비전선포식이란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래요.

지난 전원위에서 세부적인 표현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위나 전원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하여  
 세부적인 문구수정 작업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식으로  
 인권증진 행동계획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하네요.

드려 발전기획단 대응 활동을 마무리할 때가 왔네요.  
 걱정되는 것은 경내 씨가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  
 재때 성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특히 인권회의 차원으로 성명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성명서 발표 시기를 더욱 늦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발전기획단 대응 활동이 일단락된다는 것은 좋은데,  
 의미있다고 생각한 발전기획단 대응 활동을 하면서  
 그다지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권위 대응을 하면서  
 즐겁지 않은 이유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 예상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의미있는 일이더라도 과감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권증진 행동계획안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대응계획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목 [공지]국가인권위 비전 선포식  
이름 경내  
번호 4276 조회 7  
등록일 2006년 03월 02일 16시 07분 14초

발전기획단 논의 내용 중 업무전략기획을 중심으로  
비전선포식을 갖는다고 하네요.

3/13(월) 11시이구요,  
조만간 참석 요청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권회의 차원에서 발표하는 성명서 초안은 제가 잡을 거구요,  
다음주 중에 완성해서 내부 회람하도록 할게요.

성명서 준비에 조금 여유가 생겨 휴 다행\_))



|       |                           |    |   |
|-------|---------------------------|----|---|
| 제목    | [자료&공지] 국가인권위 업무전략기획안 최종본 |    |   |
| 이름    | 경내                        |    |   |
| 번호    | 4289                      | 조회 | 5 |
| 등록일   | 2006년 03월 06일 23시 02분 24초 |    |   |
| 관련사이트 | -                         |    |   |
| 첨부파일  | 업무전략기획안_최종.hwp(124.0 KB)  |    |   |

국가인권위 임송씨로부터 업무전략기획안 최종 확정본을 받았어요.  
 이걸 기초로 성명서 초안을 작성해볼 생각입니다.  
 평택 상황이 다급하기도 하고, 워낙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 낮은 터라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을 모아  
 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더불어 지난번 공지한 바와 같이, 13일 오전 11시 비전선포식을 한다네요.  
 사랑방으로도 정식 초청장이 왔는데~, 가야 할까요?

만약 가야 한다면,  
 제가 담주부터 안식주에 들어가는 터라 병용형이 가실 수 있다면 더없이 고맙겠다는 생각.  
 병용형 생각은 어떤신지..

제목 Re: 비전선포식 대응에 대한 제안

이름 새처럼

번호 4292

조회 10

등록일 2006년 03월 07일 12시 03분 09초

어렵겠지만 3월 13일 아침 10시에 인권위 앞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하면 어떨까요?

아마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비전 및 작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언론에서는 아마도 좋게 좋게 써 줄 듯 합니다.

많은 활동가가 동참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5명 정도가 미리 작성한 성명서를 읽고 비전선포식에 불참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지리했던 발전기획단 대응도 아쉽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일 듯...

개글님 남김 2006.03.08 00:04

형 제안을 보고 이래저래 고민이 드네요~작성과정의 문제점은 있지만, 초를 치는 기조로 가는 게 적당할지 의문이에요. 사랑방 이외에 다른 사람들 조직도 좀 힘들어보이기도 하구~ 우리 못다한 상임회의 목요일에 하는 건가요? 그때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기자회견을 따로 하는 거라면, 성명서 기조가 사뭇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고웅\_))

새처럼님 남김 2006.03.08 11:26

성명서 기조를 어떻게 작성할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조는 일부러 초를 치려는 건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초를 친다고 인권위 쪽에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저는 인권위가 하려고 하는 대로 맛있게 끌려가기 싫을 뿐이에요. 그래서 비록 비전이 내용적으로는 좋더라도, 작성 과정 상의 문제를 들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인권회의 차원의 성명에 대해 일언반구하지 않은 것도 꽤 씁하고요. 인권위는 인권단체의 촉하 속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싶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인권위 비전대로 인권위가 향후 3년의 업무를 잘 추진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밝히면 좋겠죠. 인권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전선포식 때 기자들이 인권단체의 태도에 대해 인권위는 어떤 입장인지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초를 치는 건가요? 어쨌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내일 상임회의 있나요?

제목 [성명초안] 국가인권위 비전선포식 성명 초안  
이름 경내  
번호 4301 조회 7  
등록일 2006년 03월 09일 12시 34분 03초  
관련사이트 -  
첨부파일 비전선포식성명초안\_060313.hwp(30.5 KB)

작성했습니다.

래군이행, 돌려주시압~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즈음한 인권단체 공동 성명(초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픈 각성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 행동계획'(2006-2008)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3년간 인권위의 업무전략과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을 갖는다. 국가인권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종착지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다짐하며 촉포를 쏘아올리는 이 때, 그 누구보다 이를 반겨야 할 우리 인권단체들은 씩씩함을 넘어 위태로운 심경으로 국가인권위의 2차 출항을 지켜본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항로는 휘황찬란하면서도 비장하기조차 하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겠다는 다짐, 문턱을 낮추고 믿음직한 권리구제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 수동적으로 개별 진정사건을 해결하는 데 안주하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인권옹호와 예방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겠다는 다짐 등 어느새 설립 5년째로 접어든 국가인권위가 충실한 인권감시·옹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들을 비교적 충실히 뽑아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고 인권단체를 비롯한 인권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한다.

하지만 그 시작을 알리는 뜻은 인권단체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 힘차게 올려지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인권단체 활동가와 개인 전문가가 외부위원으로 대거 참여한 가운데 '발전기획단'이 처음 꾸려졌을 무렵만 하더라도 우리 인권단체들은 2기 국가인권위가 합선을 수리하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데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민간초청 워크숍을 거쳐 국가인권위의 혁신과제를 함께 도출하자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데 이어 아예 국가인권위 설립 4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워크숍을 열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는, 그간 관료주의적 독선과 폐쇄의 늪에 빠져있던 국가인권위가 비로소 인권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구나 하는 의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 남짓 후, 인권위원들은 발전기획단의 존재 의의와 논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워크숍마저 사무처 차원의 실무 워크숍으로 격하시켜 버렸다. 인권단체들의 비판 성명에 대해 일언반구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발전기획단을 일방적으로 해소해 버렸다. 그리고 5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라는 폐쇄적 단위에서 오늘 발표될 '인권증진 행동계획'이 최종 잉태됐다. 그러면서도 국가인권위는 비전선포식을 앞두고서야 인권단체들을 부랴부랴 환영인파로 나와달라 초청하면서 마치 이 계획이 인권단체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지 속에서 마련된 것인 양 치장하고자 했다. 필요할 때만 인권단체를 들러리세우는 태도야말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2기 국가인권위의 과제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나아가 최근 국가인권위가 보여온 행보는 향후 국가인권위의 좌초를 부를 암초가 바깥이 아닌 안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불과 얼마 전, 군부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다 자살까지 결심하고 휴가를 나온 A씨를 긴급구제해 달라

는 요구를 국가인권위는 차갑게 외면했다. 지난 12월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경찰력의 폭압에 생목숨을 잃었을 때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책임자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해서도 껍데기뿐인 법 논리 뒤에 숨어 애초 법안보다 더 후퇴된 의견을 내놨고,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불법적으로 표적연행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번뜩이는 인권감수성으로 인권피해자들의 곁에서 권력기관과 맞짱을 떠야 할 국가인권위가 오히려 권력기관의 사정을 살피는 데만 열심인 형국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요란한 출항식 참가를 거부하고 인권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을 기억하는 길을 택한다.

지금은 국가인권위가 비전선포식과 같은 이벤트를 열 때가 아니라, 뼈아픈 각성과 결단의 고백이 필요할 때다. 특히 국가인권위를 이끌고 있는 인권위원들은 인권이 깃뻛히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인권단체의 의견과 경험에 귀기울여 자신들의 빈약한 인권의식과 감수성부터 쇠신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 전체 구성원이 인권 정신에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 발표되는 인권증진행동계획이 문서 속에서 끝나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도마 위에 던져 비판을 경청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인권증진행동계획에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외부 평가체제를 확립하겠다'는 다짐도 포함돼 있다. 이 다짐의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대상은 바로 오늘 발표되는 인권증진행동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내부에 집행과 모니터를 담당할 책임단위를 마련하고 인권현장의 평가와 고언을 듣는 정기적 통로를 마련할 때만 오늘의 비전선포식이 걸만 번지르르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며 순항하느냐, 아니면 잘못된 항로를 고집하다 결국 좌초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가인권위가 스스로 만든 암초에 걸려 좌초되지 않으려면 인권을 빼앗긴 이들의 신뢰와 지지를 엔진 삼아, 인권단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야 한다. 인권단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오늘의 이 초라한 비전선포식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인권위원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 전체 구성원이 진정한 자기 개혁에 나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년 3월 13일

인권단체연석회의